

유동성 확 늘려 경제위기 '뇌관' 제거

■ 정부 2009년 경제운용방향

외평기금 20조원 확충 ... 시장불안 해소

금융 분야 구조조정 ... BIS 비율 제고도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위기 관리 부문에서 첫번째로 유동성 관리 문제를 꼽았다. 올해 경제 위기가 금융부문, 그것도 유동성 문제가 뇌관이었던 만큼 내년에 도약 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외평기금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 단계별 대응방향의 첫번째 장인 위기 관리 부문을 유동성 공급 지속확대로 시작하고 있다. 원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을 계속 확대해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표현이다. 특히 2급은행이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신용 경계감이 상존하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미시적인 대응도 강구하고 있다.

재정부는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9조원)을 배정해 중소기업 지원 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해 가계대출 부실화를 방지하며 대출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가계대출 만기·거치를 연장하

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해 보증자리론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채의 유통발행 규모를 균등하게 하고 만기물별 비중을 조정하는 등 작업을 통해 분기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용경색 발생 시에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외평기금을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20조6천억원으로 확충해 시장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통한 부실 선제 대응=금

융부문을 통한 실물구조조정 작업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과감한 부실청산으로 불확실성을 도려내고 이를 통해 건전한 기업에 더 원할하게 자금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은행이 증자, 배당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시중 여유자금을 후순위채, 상환 우선주 매입 등 은행의 BIS 비율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책기관의 자

본을 당초 4조2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증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인수·정리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부실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담보인정비율(LTV) 과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자발적인 인수·합병(M&A), 대주주 출자 등을 유도하고, 자기노력이 미흡하면 신속한 퇴출·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보증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BIS 비율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국책기관의 자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 규모도 7조1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도 융자자금 지원을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 4조3천억원으로 늘리고 이용편의성도 높인다.

◇국제공조도 강화=정부는 이와 함께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G20이 선진국과 신흥국간 주요한 정책공조체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4월에 열린 차기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ASEAN+3' 재무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이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체제 강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대 기업 중 30~40%

“경영 위험 노출 가능성”

국내 100대 기업 중 30~40%는 내년에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 서울사무소 대표는 1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상장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전망했다.

이 대표는 “각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40%에 이르는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하고 자산매각이나 부채구조 최적화, 원가절감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분석대상 기업 중 경영상황이 우량한 30% 가량은 내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나 인수합병, 연구개발 등으로 적극적으로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최고경영자(CEO)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리더십팀’을 확대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CD금리 0.25%p 급락

2년6개월來 최저 수준 ... 주택대출 이자 부담 줄듯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2년 6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91일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25%포인트 급락한 4.49%로 거래를 마쳤다. CD 금리가 4.5%선 아래로 떨어진 것

은 2006년 6월 19일의 4.48% 이후로 처음이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시장에 2조원을 공급한 것이 금리 인하를 유도한 것

으로 분석된다. CD 금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과거적으로 1.0%포인트 내린 지난 11일 0.69%포인트 하락했었다.

CD금리의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주택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됐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통폐합 금물살

정부 기능조정·민영화 등 내년 6월까지 완료

정부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통합과 기능조정, 민영화 등 3대 과제를 완료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공기업 개혁이 금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영화는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공기업의 통합이나 구조조정, 기능재편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10월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를 통해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총 319개 기관의 방향을 정했다.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전부를 포함해 38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가스공사와 방송광고공사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38개 기관은 17개로 통

합하기로 했다. 또 정리금융공사 등 5개는 폐지, 20개 기관은 기능 조정대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산하기관에 대한 통합 및 기능조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당장 민영화할 기관을 빼고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받아 정밀 검토 중이다. 10% 경영효율 향상이라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소의 해’ 캘린더 메달 2009년 기축년(己丑年)을 맞아 한국조폐공사가 한 정 수량(2,000정)으로 발행한 ‘소의 해’ 캘린더 메달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화동양행에서 공개됐다. /연합뉴스

주식·주택 가격 하락 지속됨

민간 소비도 위축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올해 11월과 같이 위축돼 있으면 민간 소비에 1.3%포인트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부 당국의 공식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내면서 이런 내용의 ‘주식·주택 가격 하락의 소비위축 효과’ 분석 자료를 냈다. 재정부는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가격 하락은 소득 감소를 통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실질주가가 1% 떨어지면 민간소비가 0.03%포인트, 실질주택가격이 1% 낮아지면 민간소비가 0.18%포인트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정부는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한국은 주가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주택가격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증가하면서 개인의 채무상환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금융부채비율과 원리금상환부담률이 높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연간 2천만~5천만원 소득자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23.0%였지만 5천만~8천만원은 18.0%, 8천만~1억원은 16.2%였다.

원리금상환부담률은 가계의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 합계를 가져본 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가계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일상적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연합뉴스

이번엔 증권사가 화났다

고객 상대 미수금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증권사들이 추가 급락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다양한 형태로 쏟아지자 고객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현재 고객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24곳이고 전체 소송 건수와 금액은 118건, 957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증권사들이 낸 소송에는 채금 징수와 대주채 관련 사례도 포함되나 대다수는 주식이나 펀드 피해 고객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나 미수금 반환소송 등이므로 파악됐다.

소송 유형을 보면 신용거래 등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추가 급락으로 이른바 ‘강통계좌’가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에 나섰고,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여금을 다 회수하지 못한 자 소송을 낸 사례가 가장 많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보장 각서를 써줬다 손해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가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증권사가 대응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때도 있다.

주식매수 주문을 낸 고객이 결제하지 않아 증권사가 대신 결제를 해주고 나서 해당 고객이 대해 신용보증금을 서준 다른 개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사례도 종종 있었다.

증권사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송 외에 세금징수에 불복하거나 대주채와 관련한 소송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체 증권사 소송 건수 313건 중에서 195건은 고객 등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연합뉴스

내년 車 판매량 8.7% 감소

자동차공업협 보고서 ... 내수·수출 부진 105만대 전망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6일 ‘2009년 자동차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업계가 내년에 내수와 수출, 생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올해보다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까지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자동차 할부 금융 경색 등으로 올해보다 8.7% 감소한 105만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량은 올해 대비 5.6% 감소한 255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는 국산차의 품질과 성능이 향상되고 업체들이 전략차종 투입

을 확대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선진국들은 물론 신흥시장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예상치이다.

이에 따라 내년 자동차 생산은 올해와 비교할 때 6.5% 감소한 360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차의 경우, 내년에 소형차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판매량이 확대될 것이지만 환율상승과 리스크금융 위축으로 올해보다 6.7% 감소한 7만대가 판매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내년 산업기술 R&D 예산 상반기에 4조 집행

총 예산의 66% 가량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R&D)분야의 내년 예산이 상반기에 3분의 2가 대거 집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총 4조원 규모의 2009년 R&D 예산을 예년보다 앞당겨 17일 공고하고 오는 23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서울지역 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D 사업 및 예산관련 통합공고는 통상

1월에 시행됐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지경부의 R&D 관련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12조3천300억원)의 32%로, R&D 관련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는 사업의 조기 공고와 추진을 통해 올해 41%에 불과했던 R&D 예산의 상반기 집행비율을 내년에는 66%(2조6천억원)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금리 인하 보다 유동성 공급 더 효과적”

삼성경제연구원 주장

신용위험이 크고 정책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공급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미국 통화정책의 전개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3.0%로 인하하면서 저금리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연구소는 “정책금리가 낮아질수록 금

리의 정책적 효과는 약화된다”며 “정책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미래의 기대 정책금리를 낮추려는 시도는 효과가 작고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안이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신용위험이 커도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기 정책금리 인하가 장기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회사채 등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HRN	[광주]SK텔레콤 미납상당원 연봉2400만/주5일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2/19	062-529-2671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광주) 빈출 판매사원 (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0	062-360-1826
대신기업	경리, 회계업무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12/20	062-383-0011
아이비클럽 광산점	교육판매 및 매장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956-4878
엔칼리스	디자인 실장급 및 경력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2/23	062-228-8280
게이트웨이	온라인게임 아이템판매관리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23	062-956-2648
신한생명(주) 본사	ITM상담직(신한금융 공채상담원-기본보장150만,주5일)	고졸/경력무관	3400~3600	12/23	02-3453-6623
스니그나스파워	[에너지분야]회계, 총무 분야사원	대졸/경력1년	1400~1600	12/23	062-530-0480
호박나이트	[첨단무대조명]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23	011-2315-8274
유한회사광산서비스센터	컴퓨터 A/S 경력직	고졸/경력5년	1200~1400	12/24	062-961-0073
서도건설(주)	본사 설비공무(현장,공사관리 등)	고졸/경력3년	2600~2800	12/27	062-682-8383
큐엘에스팜	물질분석, 정제, 합성, 동물실험, 세포실험 기타 연구개발	대원졸/경력무관	2600~2800	12/31	062-972-3520
금아산업개발(주)	지체입출고관리,하자관리,건축기술자,건축.CAD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1	062-373-1440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